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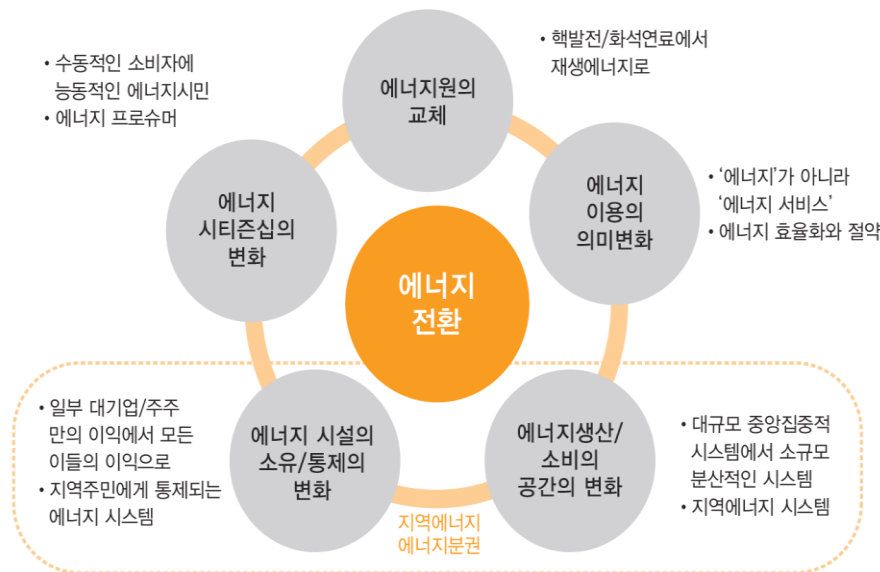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8. 9.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 에너지전환은 지금까지 형성되고 가동되어 온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그 사이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한재각, 2017).
-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 규범의 전환, 에너지 생산, 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전환, 생태환경과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의 전환, 에너지 생산, 공급의 소유, 운영, 관리 주체의 전환, 에너지-사회시스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됨.
- 특히 에너지 시설의 소유와 통제 및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는 지역에너지 또는 에너지 분권과 깊은 관련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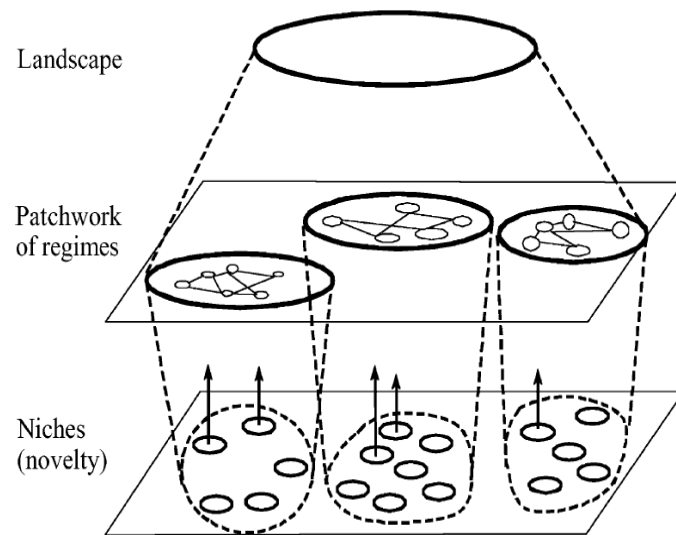
지역에너지의 의미

- ‘지역에너지’는 특정한 관할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이용자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특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을 의미.
- 지역энер지를 에너지 전환과 결합하여 본다면,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 자연 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가는 것”(이유진, 2008; 한재각 2017에서 재인용), 또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에너지 정치를 뛰어 넘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에너지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여형범, 2016; 한재각 2017에서 재인용)으로 정의 가능함.



에너지 전환의 다수준 조망(MLP) 접근

-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 이론에 따르면, 시스템 전환은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외에도 기존 시스템의 관성과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다양한 관련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20년부터 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과정임.
- 전환이론에서는 거시환경(landscape), 레짐(regime), 니치(niche)의 세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지방 정부와 도시 공간이 갖는 행정력과 제도, 집적된 구조의 수준은 에너지 전환에서 레짐과 니치가 상호작용하는 열린 ‘전환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함. 지역은 ① 지방 수준이 갖는 적절한 정치적 영향력, ② 지역 대중과의 결합, ③ 기술과 인프라 스트럭처의 특징이 갖는 측면들(Fudge et al., 2016)이 의미 있게 작용함.



해외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 해외의 여러 도시들이 지역 수준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기획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을 심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고 있음.
- 유럽에서는 자유화 또는 민영화되었던 에너지 산업의 재공영화 또는 재지역화의 맥락과 함께 하는 경우가 보이고, 미국은 연방적 정치제도 속에서 주정부와 도시정부가 에너지 회사 (utility)를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환과 분권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 뿐 아니라 재지역화된 지역의 에너지 기업, 그리고 시민 수준의 에너지 협동조합과 비정부기구 등이며, 이들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고 있음.
- 최초의 에너지 전환 계기를 보다 큰 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을 참여시키면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효능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 중요함.

해외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독일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그라츠	미국 버몬트	캐나다 에드먼튼
에너지 전환의 계기	에너지 시장 자유화의 부작용 에너지 공급사의 운영권 계약 만료	대기질 저하로 대응 정책 요구 츠벤덴도르프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경험	환경윤리, 자립경제 가치 부여 버몬트양키 핵발전소 가동중단(2014)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 나쁜 대기 질, 기후변화 체감 전환의 기회요인 인식
주체	시정부, 시민 에너지 조직	사민당, 시의회, 전문가	주정부 에너지행동네트워크	시정부, 시의회 앨버타에너지효율동맹
전략	시영회사(Stadtwerke) 설립 재지역화 주민투표	대기정책->교통정책->통합적 에너지계획	총괄 에너지계획, 유틸리티에 목표 부여 스마트그리드, 녹색일자리	기후변화 플랜 지역공동체 에너지프로젝트
기구/제도	함부르크 에너지 회사 (GmbH)	환경부서 강화 에너지청 설립 이해관계자 포럼	에너지투자회사 효율화 유틸리티지원	탄소세 신설 재원 재생에너지 지원금

한국 에너지 분권 논의의 배경

-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체계 및 관행은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됨.
- 국가에너지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 주요 에너지 계획은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업무는 수요관리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에너지 사업의 권한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고 실행은 에너지 공단에 위임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노정함. 또한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은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경로도 제약하고 있음.
- 지역은 주요 에너지 수요자이자 발전과 송배전 시설의 건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계획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DAD (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행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함.
- 후쿠시마 핵사고, 밀양 송전탑 갈등 등 최근 국내외의 사건들과 상황도 지역 에너지 담론과 에너지 분권의 요구에 힘을 더하고 있음.
-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과 확충의 기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내 에너지 분권 논의의 흐름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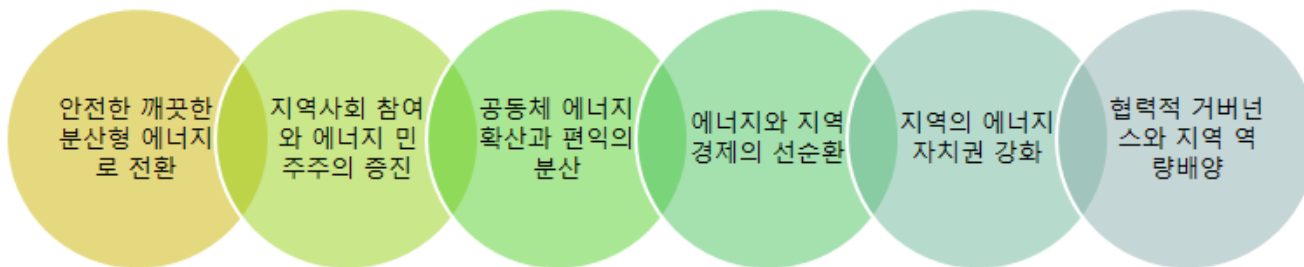
- 국내에서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분권이라 불리지 않았을 뿐 그 문제의식은 에너지 전환의 이론과 실천의 확대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 옴.
-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에너지 분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산되어 왔음. 지방자치의 역사가 축적되면서 에너지 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에너지 분권화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검토도 시작됨(고재경, 2016).
- 분산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프로슈머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분권의 이슈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초반부터 시민사회가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에너지전환 운동이 2011년을 경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 자치·분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에너지전환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증가, 시민 참여 확대, 지역 상생,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자치와 분권 측면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 분권의 담론

- 에너지 분권에 동의하더라도 그 주장의 동기와 강조점은 다양하며, 크게 보아서 ‘도구적 활용론’, ‘전환실험 공간론’, ‘분권자치 강화론’으로 나눌 수 있음.
- 현재까지 다수의 논의는 에너지분권을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도구적 관계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음. 에너지전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증대 정책에서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분권의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전환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환실험 공간론임.
- 분권자치 강화론은 효율성 담론이 지배하기 쉬운 에너지정책의 맥락에서 에너지분권을 바라보는 대신, 민주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 분권과 자치론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분권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에너지분권 없는 에너지전환”은 의미가 없게 됨.

에너지 분권의 수단과 방법

- 현재 한국에서 에너지 분권은 관련 사무의 위임과 권한 이양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미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① 지역에너지계획(공식/자율) 수립과 집행. ② 지역 에너지공사, 에너지센터, 에너지기금 등 자체 조례에 근거한 에너지사업 기관 설치와 예산 운용. ③ 현행 법제도를 우회하는 기법의 활용(로드맵 등 비법정 계획과 목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지침, 타 지자체 및 기업과 MOU 체결 등). ④ 중앙정부에 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등.
- 이미 일련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분권화’의 측면과 ‘기술적인 분산화’의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시민참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형성과 발전이라는 부분은 지역 수준과 범위에서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과 기술의 측면이 충분히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줌.



* 고재경(2017) 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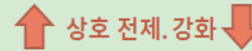
에너지 분권의 개념과 구성요소

- 에너지 분권의 개념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혹은 관련하여, “지역에너지 관리의 책무와 권한을 동시에 확보 및 강화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이는 에너지 분권이 단순히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권한 위임이나 분산이 아니라, 첫째, 에너지 전환에서 지역(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를 배경과 전제로 한다는 것과 더불어, 둘째,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관리의 책무와 권한을 동시에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개념 정의임.
- 또한 에너지 분권의 구성 요소로
① 에너지 행정과 예산의 지역 분권 (위임 및 이양)과 함께, ② 지역 수준의 에너지 생산과 관리, 시장 확대, 기업과 시민 역량 증진을 통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역량 확보와 강화를 포함. 또한 ③ 지역 범위의 에너지 기획과 프로그램은 협의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에너지 분권이 현실에서 추진되도록 만드는 전략적 행동의 영역으로 추가함.

▲개념: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하여/관련하여,
“지역에너지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확보/강화하는 것”

▲구성요소 및 수단

1. 에너지 행정과 예산의 지역 분권 (위임/이양)



2. 지역 수준의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 역량의 확보와 강화

협의의
구성요소

[+ 3. 지역 범위의 에너지 기획/프로그램] → 전략적 행동의 영역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구성요소와 자원 예시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구성요소		내 용
에너지 행정과 예산	부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예산	에너지사업 예산, 기후변화기금
	기구	서울시 에너지공사
	법제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서울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에너지 조례
에너지 역량	에너지 수급	에너지 자립률, 재생에너지 설비량
	에너지 인프라	전력망, 열에너지망
	에너지 경제력	에너지 기업, 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거버넌스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실행위원회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 협동조합 등
에너지 기획/프로그램	중기 에너지 계획	서울시 에너지 기본계획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원전하나 줄이기
	재생에너지 보급	태양의 도시 서울
	개별 정책	에너지 자립마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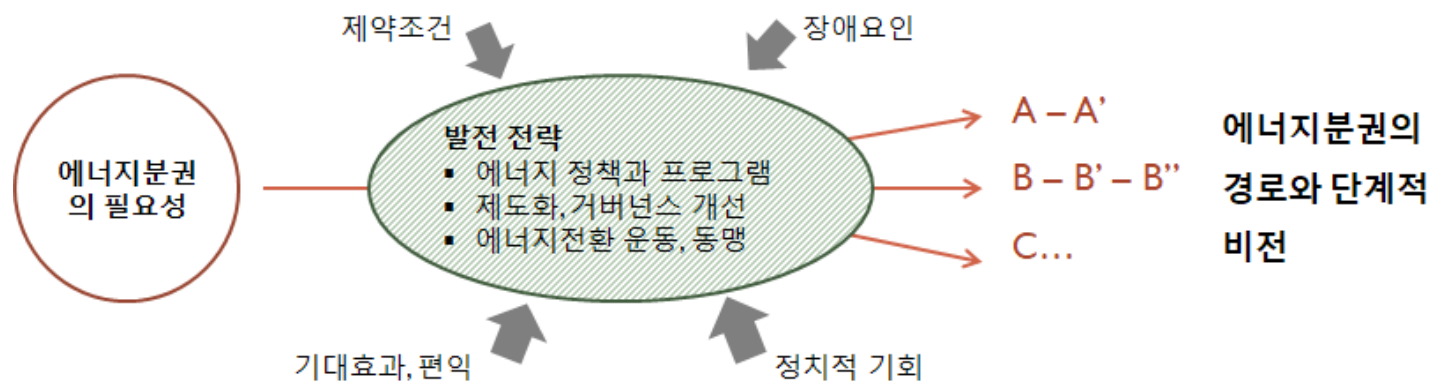
에너지 분권의 수준

-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과의 관계와 논리의 적극성 수준에 따라서 방어적 에너지분권, 보완적 에너지 분권, 전환적(급진적) 에너지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방어적 에너지분권론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 지방정부(및 지역 공동체)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임.
- 보완적 에너지분권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인력, 조직 및 예산을 위임하여 보장하라는 요구임. 이는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증진 등의 요구와 연계되면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제약을 제거하고 자원과 역량을 지원할 것을 주장함.
- 전환적(급진적) 에너지분권론은 중앙 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 레짐을 상당한 정도로 해체하고 지방정부 및 그 연합체에게 에너지정책 결정 권한과 예산을 분할하여 이양하라는 급진적인 요구임. 독일의 지역에너지공사를 사례로 생각 해볼 수 있음.



에너지 분권의 발전 경로

- 에너지 분권은 지역(지방정부, 지역사회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변용하여 에너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율권과 역량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특수한 열린 경로를 따라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수준의 에너지 상황은 지역마다 다른 배경과 제약조건 및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에너지 분권의 경로와 단계적 비전을 그려볼 수 있고, 에너지 전환의 기대효과와 편익, 기회 요인들을 활용하여 일련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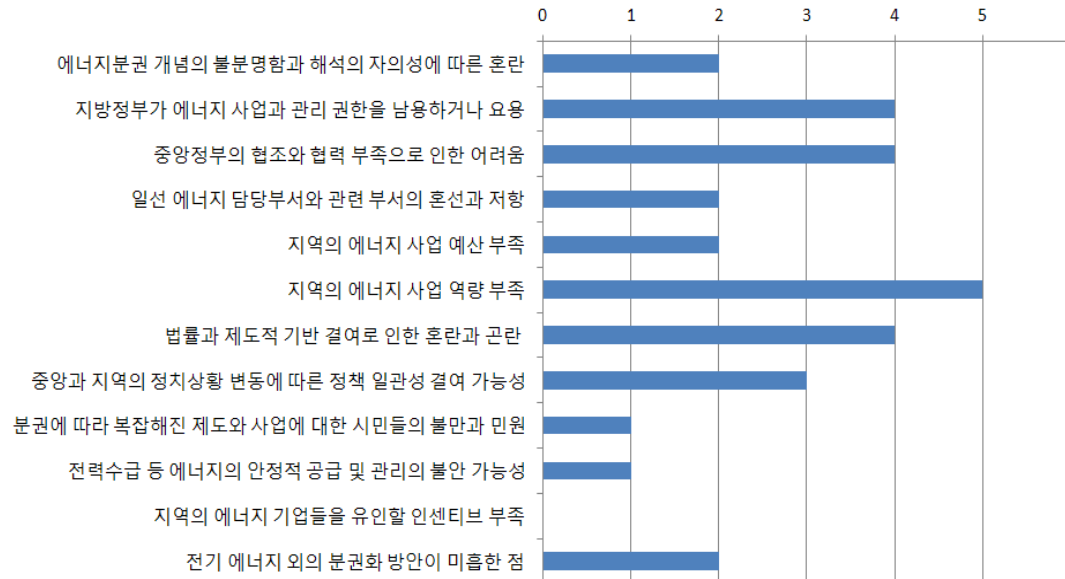
에너지 분권의 장애물과 우려 지점

수준	내용
중앙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위수준 정부의 경쟁력에 신뢰가 없고, 그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게 '자동으로(default)'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책임성에 대한 신뢰가 없음. 2. 정부의 상이한 부위들이 분산화에 대한 확신이 다름. 개혁을 주도하는 부서들은 종종 다른 부서들이 권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음. 3. 법률적 구조들은 하위 수준 거버넌스가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종종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4. 분산화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은 종종 분산, 위임 및 분산이 되어야 할 적절한 스케일/지리적 범위에 대하여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짐.
지방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권력들이 높은 수준(중앙정부)에서 낮은 수준(광역 등)으로 분산화되지 않을 경우, 그 권력들이 '간극을 채우기' 위하여 지방정부들로부터 업스케일 될 것이라는 위험성. 6. 정치적 경계의 모든 변화들은 소수파가 통제하는 단위들을 위협함.
대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대중은 중앙정부 개혁에 관심을 갖지만, 하위 정부의 변화에는 관심이 덜하며 현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8.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만 새로운 제도나 분산화의 조치들을 지지하게 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문해력(energy literacy)이 중요함. 9. 사람들은 분산화된 시스템이 엘리트(더 많은 정치인과 더 많은 제도들)를 더 만들어 낼 것이라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음. 이 모든 것은 돈이 더 든다는 것을 의미함. 10. 정체성(그들의 전통적 정체성/문화를 위협할 것이라는)과 통제력(누가 그것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

자료: Brown et al.(2015)

에너지 분권의 장애물과 우려 지점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서면질의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 강화하는 법제도와 중앙부처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등의 경직성과 더불어, 지역의 에너지 사업 역량의 부족을 가장 큰 우려 지점으로 응답.
- 이에 비해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의 불안 가능성,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을 유인할 인센티브 부족 같은 우려는 당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에너지 분권의 쟁점들

구분	내 용
개념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권 개념의 다의성과 불명확성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시장적 분권 등) - 지방분권 자체의 제약에 따른 에너지 분권의 원초적 한계
제도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초 단체 사이의 에너지 분권의 수준과 역량 차이와 협력 - 에너지예산 칸막이 없애기, 에너지공사 및 센터 확대와 사업 확장의 현실성
정치사회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정치적 오용 가능성 - 일선 담당부서의 혼선과 반발 - 정책 일관성 하락의 문제 - 복잡해진 행정과 절차에 따른 시민의 불만
기술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열, 연료 등 에너지원 형태에 따른 분권의 차이와 접근 - 에너지 분권에서 전력 송배전망 분할과 자유화의 자리매김
거버넌스/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사무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방법 - 에너지 분권에서 시장(기업), 시민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에너지 분권의 정책 과제

- 전문가들의 서면질의 답변 결과를 보면, 지역에너지계획의 자율성과 실효성 강화가 가장 많은 선호를 보였고, 지역의 에너지사업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포괄적 지역 에너지예산 도입,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증진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힘.
- 이에 비해 지역 에너지 통계와 데이터 확보 및 집단에너지 관리감독 권한 보장, 지역별 전력(배전)회사 설립과 시장 운영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당장 개선 가능하거나 실효성이 큰 것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탓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얻은 경험과 역량 -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와 큰 예산규모 - 에너지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기후환경본부 - 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에너지 역량과 에너지 거버넌스 - 서울에너지공사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에너지소비와 낮은 에너지자립도 - 정부 보조금/지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대도시 조건상 재생가능에너지 입지의 한계 - 자치구들의 에너지 역량 미흡 - 분권을 가로막는 관련 법제도 - 시민들의 피로도 증대와 불만 - 재생에너지 확충에서 서울시 권한의 한계 -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서울시 권한의 한계 - 전기에너지에 편중된 에너지전환 정책
기회(Opportunities)	위기(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 -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실행 계획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적극적 태도 -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등 타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움직임과 협력 -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판과 기대 - 재생에너지, 전력 및 에너지 신사업 등 에너지전환 시장의 확대 - 에너지 시민성의 꾸준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자치구들의 비협조적 태도 - 정치상황 변동에 따른 정책 단절 가능성 - 중앙정부의 하향식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권한 위축 우려 - 체감 가능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움 - 전기요금 인상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님비 현상으로 정책 수용성 저하 - 분권의 법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무리한 자체 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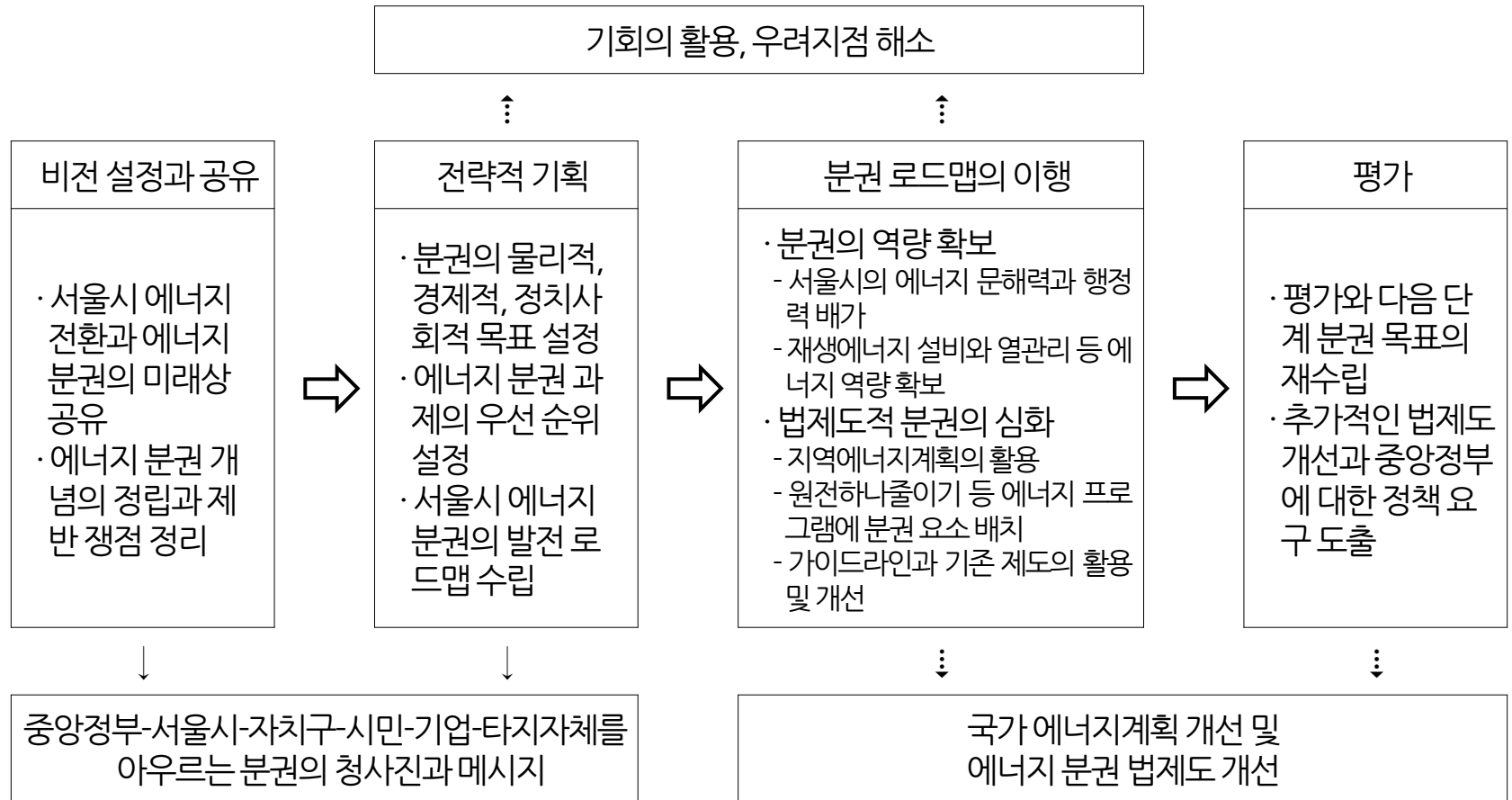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SWOT 전략 도출

	기회	위기
강점	<p>S/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기조와 적극적인 태도를 뒷받침하여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에너지 분권 기조를 만들어 나감 - 에너지전환 시장이 확대되고, 에너지시민성이 꾸준히 성장하여 에너지자립마을, 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을 통해 분권의 가능성을 키워감 	<p>S/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장들과 지자체장의 정책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들의 협조를 요청 - 분권을 명시한 법제도 제정으로 단체장의 의지, 정치상황 변동에도 꾸준히 에너지 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 수용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에너지역량의 강화
약점	<p>W/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 대신 확대된 에너지전환 시장으로 민간과 시민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분권 역량 확보 - 시민들과 자치구들을 모아 교육을 진행하여 자치구/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치구/시민, 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냄 	<p>W/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를 보완하여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에서 서울시 권한을 늘려가도록 함 -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중앙의 하향식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역효과를 받지 않도록 함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현재와 미래

구분	구성요소	전망과 목표	
		현재	미래
에너지 행정과 예산	행정	기후환경본부에 국한되고 전문성 미흡	에너지 문해력 갖춘 인력과 에너지전환 위한 통합적 부서 운영
	예산	기후변화기금, 사업별 성과 예산	에너지사업 포괄예산제 실시와 민간 투자 확대
	기구	서울시에너지 공사의 초보적 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열공급까지 담당 하는 종합적 기구로 상승, 확산
	법제도	상위법, 기존 조례 및 지침의 활용	에너지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에너지 자 치분권 보장
에너지 역량	에너지 수급	미흡한 에너지 자립률과 재생에너지 보급률	서울시 자체의 적극적인 에너지 생산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달성
	에너지 인프라	송배전, 열공급망에 대한 통제력 거의 없음	송배전, 열공급망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 확보
	에너지 경제력	서울시 내의 에너지 기업, 에너지 일자리 미미 함	에너지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과 지역 밀착형 일자리
	거버넌스와 시민성	사업별 거버넌스, 태동중인 에너지 협동조합	서울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주 역이 되는 에너지 시민의 성장
에너지 프로그램	에너지계획	국가에너지계획을 보조하는 법정 계획과 자율 적 에너지 관리 계획	서울시 자체의 에너지 전환 구상과 자원 동원 및 이행
	기타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자립마을 등	상향과 하향(분산화와 집중화)이 통합되는 촉촉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자치구	-	위임사무 중심,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	자치구별 에너지전환 기획 수립과 이행 역량 확보

서울시 에너지 분권 발전의 단계와 전략



서울시 에너지 분권의 정책 과제

- 첫째, 재생가능에너지 등 지역의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 이외에 지역에서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
- 둘째,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지역 정책을 통해 민원을 소화하고 호응성을 높여야 함.
- 셋째, 법적 한계가 큰 가이드라인 보다는 지역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
- 넷째,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강화와 활용이 중요.
- 다섯째, 단계적 접근을 통한 분권화 심화와 확대(권한 위임 → 이양)가 요구됨.
- 여섯째, 당위성만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가치 측면(안전, 일자리 등)에서 공감대 형성과 확보가 필요.
- 서울시에서 에너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시 사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기초지자체로 위임하여 기초지자체 사무를 늘리는 것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에너지 역량을 제고하는 것과, 기초지자체의 에너지 전문성, 즉 에너지 문해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감사합니다